

시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홍 일 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사적지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겐 훌륭한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사적지는 그 지역의 발전과 문화적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 시기나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문화유산 유적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사적지는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5·18사적지 2호 '5·18구묘지'는 어떤 곳인가? 이곳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산화시킨 영령들이 영면해 있으며, 이

전에 '망월동묘지'라고 불리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항쟁의 와중에서 공포와 분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주검을 손수레에 싣고왔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27일 전남도청 함락 당시 희생된 영령들이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던 곳이다.

그 뒤 여기가 민주의 성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전두환 군사반란집단은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등 5·18영령들이 죽어서까지 수모를 당했다.

다행히 1994년부터 묘지성역화 사업이 추진돼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가 완성되자, 5·18영령들은 처음의 17년을 뒤로 하고 새 묘역으로 이장돼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게 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곳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엿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다녀갔다.

그런데 이곳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명칭 변경해 성역화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기획을 했으며, 광주시는 성역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왜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은 대목이다. 만약 특정단체와 사전에 약속했다 하더라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가치를 망각해서는 안되며,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명칭 변경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5·18구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추모연대의 성역화 기본구상안 등을 살펴보면 먼저 묘역은 가능한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현 '5·18구묘역' 내부의 관리사무소, 화장실, 창고 등을 철거한 후 민족민주열사기념관 신축, 그리고 묘역명칭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하되 망월동민족민주열사묘역 명칭 뒤에 괄호로 5·18구묘역으로 병기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5월단체 (공법단체 5·18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는 광주시가 5·18사적지 2호 '5·18구묘지'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명칭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성역화사업이 아니며, 5·18영사를 왜곡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특히 5·18정신의 근원을 소멸시키는 행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망월동 5·18묘역'으로 새겨져 있는 '5·18구묘지'는 원형 보존돼야 하며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명칭변경하는 성역화사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잊지않고 살아가고 있는 만큼, '5·18사적지를 훼손하는 것 또한 좋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성역화사업의 철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기고

건설현장 안전 의식으로 '안심일터 실현'



홍 진 호

(주)우미건설 상무(오룡지구 현장소장)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대재해 처벌 법과 관련해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해는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동종업계의 재해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건설회사의 안전의 확보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건설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협력업체 역량 강화, 안전보건법령 정비, 근로자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적절한 건설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를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무리한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발주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공사에도 표준 공기 준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협력회사의 안전수준 향상이다. 협력회사의 안전보건업무능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및 교육 시 협력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평가 및 등록 시 안전관리자 우수한 협력회사 사를 등록시키고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중대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안전시설,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는 자율안전 컨설팅 등을 활용해 회사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게 해야 하며 재해 다발 건설사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해 재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법의 일원화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기술진흥법, 소방법 등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안전 관련법이 설정돼 있어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보건법 적용 시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할지, 난해한 어려움이 많다. 행정 편의적 법 적용보다 건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네 번째는 근로자의 의식 변화다. 위험에 마주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이 형성돼야 안전보건시스템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888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12.3%)이며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며 2000년 초반 4%에 비해 현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전 교육 시 실질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교육, 안전 VR 체험 및 외국인 전용 영상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해 위험구역에 외국인 안전 표어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통역관 제도·스마트 번역기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 도입이 중요하다. 최근 건설 현장의 현장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초고층 현장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 인력 위주의 관리의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건설사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관리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안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와 작업중지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의 위험성 공정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우고 중점 위험사항을 집중관리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권을 근로자와 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건설 현장의 불안정한 요소를 보다 광범위하게 찾고 이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건설 현장 관계자 모두가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이 습관화·일상화될 때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社說

마침내 본궤도 오른 여수 정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

여수시 정도 해양관광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해상교량인 진입도로가 7월께 착공한다. 광양 경제청이 발주한 총연장 1.351km 왕복 2차로로 집단민원 해결 이후 지난해 7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 4월엔 어항개발 관련 해양수산부·여수해수청 협의가 마무리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는 금명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호초등학교 이전도 가시화됐다. 민간사업자인 미래에셋과 전남도교육청이 합의한 '선 학교 이전, 후 개발 공사'에 따라 3월 시공사를 선정했고 5월에 시행계획 승인서가 제출됐다. 마지막 절차인 학교 축조 승인이 떨어지면 7월 중 곧바로 첫삽을 뜬다. 2025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2020년 착공과 함께 지지부진한 정도 개발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를 조성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전남 관광레저 사상 최대 규모다. 싱가포르 센토사를 롤모델로 삼아 정도 215㎡ 일원에 호텔, 콘

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캐이בל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미래에셋은 투자협약 당시 전남의 격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했다며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수는 명실공히 제1의 관광 명소로 위상을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남도와 미래에셋은 세계적 관광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최고 리조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지역 기업 참여를 보장하고 인재를 우선 고용한다. 고용효과 1만6천614명, 생산유발만 2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누구나 가고 싶은 초특급 글로벌 복합휴양단지, 대한민국 관광의 지평을 바꿀 남해안권 신성장 벨트 완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투자가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전남 관광의 황금기를 이끌 훌륭한 파트너로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정도 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길 바란다.

광주 소각장 공모 예상 밖 흥행, 혐오시설은 옛말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몸값이 더 높아졌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6곳이나 신청한 것이다. 서구 2곳, 동남·북·광산구 각각 1곳 등 모든 자치구를 망라해 개인·법인·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흥행'이다.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고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천억원 이상의 지역발전 지원금이 우선 매력적이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600~800억원 규모의 편익시설, 300억원의 숙원 사업, 그리고 해당 자치구 교부금 200억원을 망라한다. 광주시는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흥보 영상 송출, 시민 대상 오픈형 용역 보고회, 타지 선진시설 견학 등을 실시해왔다. 오염 물질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활용은 극대화한 유인 전략도 적용했다. 최적 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억제,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3-4단계 처리, 굴뚝원격감시체계 도입 등이 그것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금지됨에 따라 광주 소각장은 3천2

40억원을 들여 6만6천㎡ 대지에 600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 면적 등 공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이례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만큼 공정한 심사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광주는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후 생활 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되거나 나주 고흥폐기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지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친환경적 조성은 기본이고 문화·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함께 만들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다. 주민 휴식처는 물론 관광효과와 더불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합 여가공간으로 가치를 기우고 있다. 과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행정력의 누수 또한 심각했던 기피시설로 지리한 갈등이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다른 지역보다 선진화되고 독자적인 명소로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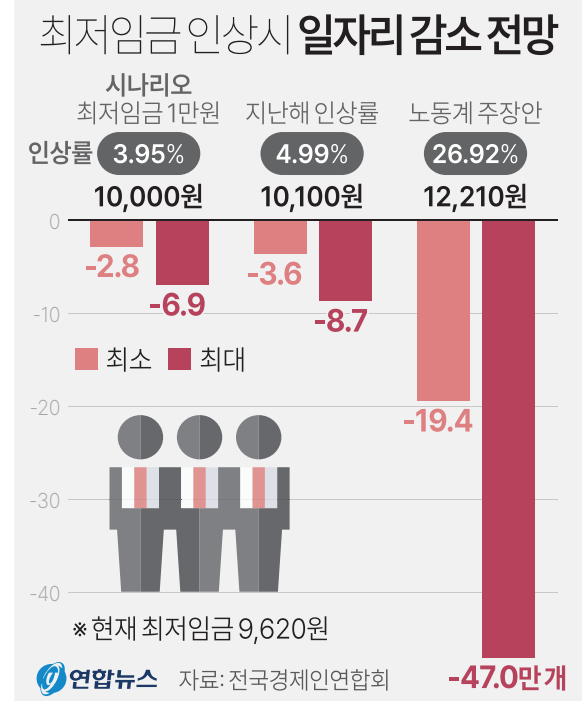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6만9천개 감소”

현재 9천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 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른 경우 최소 2만8천개에서 최대 6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천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천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만4천7천개에서 최대 4만7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독자투고

교제(데이트)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이는 2014년 6천67명에서 지난해 1만 2천84명으로 증가했다. 8년 새 무려 92.4%나 급증한 것이다. 방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교제폭력’ 대응책 마련해야

난폭해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30대가 곧바로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흥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연인 간

범죄행위에는 마땅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대투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지원 등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마약류 범죄 반드시 뿌리뽑자

어렵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독자들에게 대한 치료와 재활에 대한 사회 인프리카 필요하다. 법집행기관과 정부,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 및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힘써야 하겠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모여야 비로소 마약류 범죄 근절 등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훈·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분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제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